

2024 주요업무보고

2024. 9.

재 무 국

I. 일반 현황

조직 · 인력

6과 34팀 237명/226명 (정/현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9명 별도(재무과 3명, 38세금징수과 6명)

기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관리, 지출·계약, 세입·세출 결산 ○ 계약제도 개선,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등
재 산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교환 총괄, 시유재산 총조사 및 결산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 약 심 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부동산가격 공시 지원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난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세입·세출 예산(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최종)	증감	
			금액	비율
합계	25,414,110	27,721,761	△2,307,651	△8.3%
시세외수입	24,235,274	24,112,184	123,090	0.5%
보조금	244,797	353,209	△108,412	△30.7%
보전수입등	1,362	1,511	△149	△9.9%
보전수입등	932,677	3,254,857	△2,322,180	△71.3%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최종)	증감	
			금액	비율
합계	3,213,791	3,249,714	△35,923	△1.1%
인력운영비 (통합운영성)	875,870	815,591	60,279	7.4%
기본경비	852	2,103	△1,251	△59.5%
재무활동	16,165	16,443	△278	△1.7%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5,981	16,443	△462	△2.8%
공유재산 대부료 반환금	184	-	184	순증
국고보조금 반환	0.389	0.041	0.348	848.8%
사업비	2,320,904	2,415,577	△94,673	△3.9%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832	1,550	282	18.2%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24,353	25,351	△998	△3.9%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48	28	20	71.4%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813	1,808	5	0.3%
시세입 목표달성	13,453	5,100	8,353	163.8%
조세정의 실현	5,970	6,463	△493	△7.6%
타 기관 지원	2,273,435	2,375,277	△101,842	△4.3%
자치구 재정보전금	1,767,464	1,790,746	△23,282	△1.3%
시세 징수교부금	503,317	581,888	△78,571	△13.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654	2,643	11	0.4%

재산현황(市)

(2023 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분	토지		건물	
	필지	면적(천㎡)	동/호수	면적(천㎡)
합계	58,465	108,198(100.0%)	71,995	13,203(100.0%)
행정재산	56,406	106,887(98.8%)	6,221	5,688(43.1%)
일반재산	2,059	1,311(1.2%)	65,774	7,515(56.9%)

II . 정책목표 및 방향

적극적인 재정확충과 재무혁신으로 매력도시 서울 구현

정책 과 제

안정적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
뒷받침

공감
세정으로
시민 서비스
강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수요 적극
대응

실 천 과 제

1.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市 세입 목표 달성 총력 추진
2.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목표액 차질없는 달성

1.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체계 개선으로 과세 형평성 제고
2. 대시민 무료 세무상담으로 세금약자와의 동행 추진
3.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

1. 공정하고 합리적인 맞춤형 계약행정 추진
2. 합리적 계약심사로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조기집행 지원
3.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지적사항 조치 및 사후관리

1. 촘촘한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2.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3.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정적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 뒷받침

2. 공감 세정으로 시민 서비스 강화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4.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수요 적극 대응

1. 안정적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 뒷받침

1.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市 세입 목표 달성 총력 추진

2.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목표액 차질없는 달성

1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市 세입 목표 달성 총력 추진

- ◆ 고금리 및 경기 회복 지연 등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누락세원 발굴 등 적극적 세입 징수로 '24년 시세 목표달성 추진

□ 시세목표 : 24조 2,353억원

- '24년 6월말 징수액 : 10조 5,770억원 (단위 : 억원, %)

세 목	구 분	2024년 6월말			2023년 6월말			증감	
		예산(A)	징수액(B)	진도율(B/A)	예산(C)	징수액(D)	진도율(D/C)	금액(B-D)	증감률
합	계	242,353	105,770	43.6	241,122	108,068	44.8	-2,298	-1.2
취 득 세		53,257	27,129	50.9	52,219	23,224	44.5	3,905	6.4
자 동 차 세		11,995	6,153	51.3	10,524	6,162	58.6	-9	-7.3
지방소비세		27,306	13,662	50.0	27,869	10,388	37.3	3,274	12.7
지방소득세		76,923	44,642	58.0	79,339	54,732	69.0	-10,090	-11.0
기타 시세		72,872	14,184	19.5	71,171	13,562	19.1	622	0.4

□ 추진실적

- 시·구 협업 징수활동 체계를 위한 징수대책 회의 및 워크숍 시행
 - (대책회의) 합동 워크숍 실시(4.18) 및 시·구 합동 대책 회의 개최(6.5)
- 취득세 사후관리 강화 및 자치구 지도점검을 통한 적극적 세수 증대
 - (중과조사) 주택중과, 유예기간 경과자 요건 미충족 전수조사(3만5천건 발취)
 - ※ 조사대상 : 일시적 2주택자, 주택건설 사업자 등 유예기간(3년) 경과자
 - (세무조사) 강남구 등 12개 자치구 지도점검 결과 총 336건, 596억원 추정
- 정기분 과세자료 정밀 관리로 정확한 정기분 부과·납부 관리 추진
 - (자료정비)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과세대장 대사로 누락세원 집중관리(673만건)
 -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4. 7. 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4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시세 징수교부금	503,317,200	276,624,232	55%	503,317,200	100%

□ 향후계획

- 하반기 세수 대책 마련을 위한 시·구 합동 징수대책회의 개최 : '24.10월
- 일시적 2주택, 주택건설 관련 사후관리 및 취득세 추정 : '24.10월

2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

- ◆ 끊임없는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유관기관 협업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시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 '24년 체납 징수목표 : 2,222억원

- '24. 7월말까지 (잠정) 2,021억원 징수(목표 대비 91.0% 달성)

□ 추진실적

- 1조사관 2소송·범칙행위 고발 확행으로 재산 은닉자 강력 대응(연중)
 - 사해행위취소, 근저당권 말소 등 소 제기 및 상속대위등기 은닉재산 발굴 강화
 - ▶ 예고 171(사해 13, 근저당권 등 말소 111, 대위등기 44, 추심금청구 3), 소제기 36(사해 6, 기타 5, 대위등기 25)
 - 고액·상습 체납 면탈 범칙행위 체납자에 대하여 감치 추진
-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체납자 추적 및 강도 높은 현장 징수 전개(연중)
 - 시구청 집중단속(4월): (영치안내) 74천대 45억원 징수/ (합동영치) 예고194, 영치517, 견인13 징수47백만원
- 압류재산의 촘촘한 재검토로 체납 채권 소멸방지(연중)
 - 시효 경과된 부동산 근저당권, 가처분, 가등기 말소 소 제기로 우선순위 확보
 - 매력일자리(7명)와 협업하여 체납자 실태조사(거소·사업장)로 체납 관리 강화
- 시·자치구 채권 일괄 조사 자료 제공하여 체납 징수활동 강화(1~7월)
 - (1천만원 이상) 제1금융권 7,329건, 제2금융권 877건 제공: 32억원 징수
 - (1백만원 이상) 공탁금, 보관금, 경매사건 등 74,472건, 증권 3,966건 제공: 52억원 징수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4. 7. 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4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강력한 고액체납시세 징수	635,190	403,225	63.5%	635,190	100%

□ 향후계획

- 비양심 고액체납자기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 강화 : ~ '24.12월
-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시행 : '24.11월~12월

2. 공감 세정으로 시민 서비스 강화

1.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체계 개선으로 과세 형평성 제고
2. 대시민 무료 세무상담으로 세금약자와의 동행 추진
3.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

1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체계 개선으로 과세 형평성 제고

- ◆ '광역시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위한 국토부-서울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공시가격 검증체계 개선 방향 모색 및 과세 형평성 제고

□ 추진배경

- 공시가격은 시민과 **우리시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산정과정에서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하나, 현행은 국토부 단일 체제로 개선 필요**
 - 국토부(부동산원)의 공동주택 등 가격 산정 및 자체 검증으로 객관성과 투명성 부족
-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개선**을 위해 국토부-서울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협력사업 추진**
 - ※ '23.10.15. 국토부 발표, 공시제도 개선 방안 중 '철저한 검증' 분야 협업 추진

□ 추진실적

- **협력사업을 통해 광역지자체 공시가격검증센터 설립 근거 및 역할 정의** ('23.12.~'24.7.)
 - 광역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상시 검증 제도·절차·방법·법령 등 운영매뉴얼 마련
 - ▶ 공시가격 실태조사 대상 범위 확대 ('23년 협력사업: 9개구 → '24년 시범사업: 15개구)
 -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4. 7. 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4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지자체 검증센터를 통한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검증	151,500	-	-	151,500	100%

□ 향후계획

-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공시가격 검증센터 최종안 도출** : '24.8월~'25.7월
 - 협력사업에서 마련한 운영매뉴얼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작동 확인 및 보완을 위해 국토부와 우리시 등 3개 지자체(서울, 경기, 충남) 협업하여 **합동 검증 실시**
 - ▶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균형성 검토, 이의 신청 검토 등 공시가격 산정 절차별 센터 역할 정립
 - '23년 협력사업 이후 추가 보완사항 도출 및 개선, 수정 협의

2

대시민 무료 세무상담으로 세금약자와의 동행 추진

- ◆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마을 세무사 제도 재설계를 통해 대시민 서비스 강화

□ 추진방향

-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아파트, 이동보건소, 쉼터 등 수요집중시설로 확대하여 수혜지역 다변화
- 무료 세무상담 내실화로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 및 권익 보호 강화
 - ※ 추진실적 : '24년 6월말 2,819건, 총 누적 37,339건('15~'24.6월) 세무상담

□ 추진실적

- 시민 만족도가 높은 '찾아가는 세무상담' 수요집중시설로 확대 실시(1월~)
 - ('23년) 복지관 10회, 전통시장 등 25회 총 25회, 305명 현장 세무상담 실시
 - ('24년 7월) 복지관 8회, 전통시장 등 15회 총 23회, 307명 현장 세무상담 실시
- 제6기 마을세무사 출범에 따라 시민과 동행을 위한 홍보 강화(2월~)
 - 제6기 마을세무사 리플릿 12,000부 제작 및 배포(2월)
 - 자치구 소식지 게재(5회) 및 옥외 전광판·지하철·시민게시판 포출(3회)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4. 7. 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4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마을세무사 운영	16,628	10,695	64.3%	16,628	100%

□ 향후계획

- 복지관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지속 실시 : '24.8월~
- 마을세무사 자치구 소식지·전광판 등 제도 홍보 시행 : '24.9월~

3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

- ◆ IT의 발전,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카카오 체납알림 등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편의 증진 및 징수효율 제고

□ 추진방향

- 카톡알림으로 납세자에게 체납·환급·미납 안내 및 신청·납부 편의제공
- 지방세 고지내역 열람, 납부, 증명 발급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납세자 편의 향상
- 전자송달 매체 확대로 납세자가 편한 방법으로 송달받을 수 있는 인프라 마련

□ 추진실적

- 카톡알림으로 체납·환급을 안내하여 납부 및 환급금 수령 편의 제공
 - 카톡알림에서 ETAX로 연계하여 체납액 납부, 환급신청 및 즉시 환급처리
- 지방세 납기전 카톡알림으로 미납 등을 안내하여 체납 예방 및 납부편의 제공
 - 카톡알림에서 ETAX로 연계하여 납부 및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
 - 주민세('24. 8월 과세)에 대해 시범 서비스 후 확대 여부 검토
- STAX 모바일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로 지방세·국세 관련 증명 10종 무료 발급
 - 모바일에서 지방세 고지내역 열람·납부 후 증명발급 및 저장, 수요기관에 전송 등
 - 지방세 납부확인서/납세증명서, (국세)납세/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 소요예산 : 비예산(시금고 협력사업)

□ 향후계획

- 세외수입 체납을 카톡알림으로 안내·납부하는 서비스 제공 : '24.12월
 - 지방세 체납알림을 세외수입으로 확대하여 납부자에게 편의제공
- ETAX·STAX에 전자사서함 구축 및 전자송달 서비스 시행 : '25.1월
 - 송달매체 확대(이메일 / 간편결제앱 / 은행앱 + 전자사서함)로 납세자 편의에 따라 송달매체 선택

3.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1. 공정하고 합리적인 맞춤형 계약행정 추진

2. 합리적 계약심사로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조기집행 지원

3.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지적사항 조치 및 사후관리

1 공정하고 합리적인 맞춤형 계약행정 추진

- ◆ 서울시 계약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고, 맞춤형 계약제도 개선 및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 및 활성화 지원

□ 추진현황

- 계약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육아친화 선도기업 우대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24년 7월)
 - ▶ 육아친화 선도기업 항목 및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가산점 신설(2점)
 - 공공계약 수행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 대상 교육 및 매뉴얼 제작('24년 4월)
 - 계약 단계별 계약 절차 간소화로 계약대금 신속 집행
 - (입찰공고) 경쟁입찰 시 긴급공고 실시(최대 40→5일),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 (대금지급) 준공검사 기간 단축(14→7일), 선금(14→3일) 및 대금(5→3일) 지급 기간 단축
 - 서울계약마당을 통한 계약정보 제공 및 실적증명 등 시민 편의 서비스 제고
 - 입찰 및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계약마당으로 통합관리·공개
 - 시설공사, 용역, 물품, 문화재 수리 등 실적증명서 발급(총 8,828건)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 발주 방법의 적정성 확보
 - 변호사, 교수, 건설연구원 등 분야별 계약전문가로 구성(외부 11명, 내부 1명)
 - 70억 이상 공사 및 20억 이상 용역·물품의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 심의
-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4. 7. 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4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255,926	115,500	45.1%	233,600	91.3%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7,433	15,000	54.7%	26,250	95.7%

□ 향후계획

- 1인 수의계약의 변경계약 사전절차 강화 추진 : '24. 8월

2

합리적 계약심사로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조기집행 지원

- ◆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예산의 과다 지출을 예방하고 신속한 계약심사로 조기 재정집행 적극 지원

□ 계약심사 개요

- 대상기관 : 시(市),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재배정·보조사업)
- 대상사업 :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민간위탁

공 사		용역(일반, 학술)	물품의 제조·구매	민간위탁
토목·건축	조경·전기·통신·설비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	금액제한 없음

- 심사내용 : 표준품셈 적용,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의 적정성

□ 추진실적

- '24. 7월 기준 2,272건 1조 7,810억원 심사, 665억원 절감(절감률 3.7%)

[최근 3년간 연도별 심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연 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024. 7월	2,272	17,810	17,145	665	3.7%
2023년	3,930	34,555	33,174	1,381	4.0%
2022년	3,627	36,246	34,620	1,626	4.5%
합 계	9,829	88,611	84,939	3,672	4.1%

- 조기 재정집행 지원을 위한 사전검토제 및 유사사업 통합심사 운영

- 사전검토제를 실시하여 보완율 감소('24. 7월 보완율 평균 6.5% → 1.1%)
- 유사사업 통합심사로 처리기간 단축('24. 7월 처리기간 평균 3.2일 → 1.9일)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4. 7. 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4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계약심사 업무추진	48,000	39,075	81.4%	48,000	100%

□ 향후계획

- 발주부서 원가계산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운영 : '24.9월
- 원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서울형 품셈 추가 개발 : '24.12월

작 성 자 계약심사과장 : 김일 ☎2133-3300 심사총괄팀장 : 이경혜 ☎3302 담당 : 전세용 ☎3304

3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지적사항 조치 및 사후관리

- ◆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정요구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 도모

□ 결산개요

- 대상기관 : 40개 기관 282개 부서(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등)
- 결산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2개, 기타 10개), 기금(17개)
- 결산규모 : 총 59조 1,523억원(세출예산 51조 4,900억원, 기금 7조 6,623억원)
- 주요 결산결과
 -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1조 6,460억원 발생(전년대비 2조 4,919억원↓)
 - (재무제표) 순자산 134조 4,256억원, 재정운영결과 983억원 흑자(수익-비용) 등

□ 추진실적

- 결산검사위원 선임(3.8.) 및 결산검사 실시(35일간, 4.15.~5.19.)
 - 검사위원 선임 : 17명(시의원 3명, 회계사 등 전문가 14명)
 - 결산검사 의견 : 총 72건(시정권고 59건, 제도개선 건의 13건)
- 결산안에 대한 시의회 심사(제324회 정례회) 및 승인(6.25.)
 - 시정 요구사항 : 총 47건(시정 9건, 개선 15건, 주의 16건, 건의 7건)
 - 결산결과 고시 : 6.27.(목), 결산서 시누리집 공개 및 대시민 의견수렴
- 시의회 시정 요구사항 조치 및 사후관리
 - 실국별로 시정요구사항 조치(완료 45건, 조치중 2건), 예결위 결과 제출(8.9.)
 - 결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년 결산의회까지 지속 점검·관리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4. 7. 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4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2023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52,883	222,376	87.9%	245,825	97.2%

4. 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수요 적극 대응

1. 촘촘한 사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2.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3. 사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1 촘촘한 사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 ◆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일괄 교환 지속 추진으로 시책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 및 정밀 실태조사 확대와 적극적인 사후조치로 재산가치 증대

□ 추진개요

- 국가와 서울시 간 사용과 소유 불일치에 따른 재산관리 비효율 등 해소
- 꼼꼼한 재산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활용 권역별 정밀실태조사 추진

□ 추진실적

-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 추진
 - (1차) 경찰관서 중심 교환 완료 (계약125), 소유권 이전(422)), 유상이관 등 후속조치 진행
 - ▶ 취득 재산 : 중랑물재생센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등 총 19필지 (545억원)
 - ▶ 처분 재산 : 동작경찰서, 성북파출소 등 노후 경찰관서 총 10필지·29동 (544억원)
 - ※ 취득재산 유상이관(일반회계→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 변경(수도공급설비) 등 후속절차 진행중
 - (2차) 잔여 상호점유 재산 대상 교환목록(안) 마련 및 기획재정부 검토 요청 (6.28.)
 - ▶ 국가 점유 사유재산 : 경찰관서(체비지 포함), 군사시설, 청와대 부지 등 21필지 9개동
 - ▶ 시 점유 국유재산 : 인재개발원, 공예박물관, 탄천물재생센터 등 32필지
-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전문기관 활용 권역별 정밀 실태조사 확대
 - 서초·강남·송파 등 동남권 지역 대상 : 토지·건물 9,512필지 593개동
 - ▶ ('23)동북권+서대문 → ('24)동남권 → ('25)서남권 → ('26)도심권 → ('27)시계외
 - 전문기관 활용 획지 단위 전수조사로 정확한 사유재산 실태 파악 및 사후조치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2~6월), 현장조사 실시(6~12월)
 -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4. 7. 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4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사유재산 정밀실태조사	524,990	160,000	30.5%	482,813	92%

□ 향후계획

- 기획재정부 및 캠프와 협력하여 정밀검토 및 교환절차 진행 : '24.7월~
- 사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최종보고 및 후속조치 이행 : '24.12월~

2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 ◆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내실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미활용 재산 및 시유재산 체납금에 대한 관리 강화

□ 추진개요

-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
- 시 세입증대를 위한 미활용 재산에 대한 매각 및 체납금 관리강화

□ 추진실적

- 중장기(5개년) 市 총괄계획인 「'25~'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추진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계획수립 관련 실무자 안내 교육(5월)
 - 정책비전 및 우선순위 고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실국 자체계획 수립(~8월)
- 시유재산의 내실있는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심의 강화**
 - 쟁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진행을 위해 사전 심사(서면) 도입
 - 공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
 - ▶ (당초)부동산 → (확대)부동산 및 토지에 고정되어 공간적 검토가 필요한 동산 취득·처분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실적 : 3회(3월, 5월, 7월), 총 106건 심의
- **소규모 부지 활성화 및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한 시 세입증대 확대
 - 미활용 유휴재산 분기별 시 홈페이지 공개 : 208필지, 약 15,599㎡
 - 「'24년 시유재산 세외수입 체납정리 계획」 수립시행(4월) 및 분기별 징수실적 점검
 - ▶ 7.1. 기준 체납정리목표액 2,875백만원 대비 4,285백만원 징수(목표액 대비 149%)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4. 7. 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4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0,500	5,250	50%	9,500	90.5%

□ 향후계획

- 서울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4.10월
 - 市 총괄계획수립 및 공유재산심의(9월), 예산안 첨부서류로 시의회 제출(10월)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하반기 2회) : '24.9월, 12월

3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 ◆ 노후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 및 보강 조치를 실시하고, 철저한 시유재산 보험가입으로 시유재산의 안전성 확보

□ 추진개요

- 안전한 시유재산 환경조성을 위한 노후 시유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손해보험(공제) 가입으로 시유재산 위험 대비

□ 추진실적

- 시유재산 노후 건축물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및 안전 수선비 지원
 - 30년 이상 노후 시유건축물(1,301개소) 중 소관부서 자체점검 대상*(230개소)에 대해 전문가 합동점검 완료 (*법적의무점검시설 및 자체예산편성 시설 등 제외)
 -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소속 건축사 69명 참여(주택정책실 지역 건축안전센터 협조)
 - 안전점검결과 ‘미흡’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 용역비 지원 (27백만원)

안전등급	총 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기타
개소	230	37	109	72	9	-	3(멸실)

- 긴급수선이 필요한 중부소방서, 난지안내센터 등 11개소 지원(178백만원)
- 재해 발생 등에 따른 손실 대비를 위한 철저한 손해보험 가입관리
 - 재산관리부서의 책임강화 및 누락없는 보험 가입을 위해 가입 주체 일원화
 - ※ 재산관리과 일괄가입 + 재산관리부서별 개별가입 ⇒ 재산관리부서별 예산편성 및 가입
 - 건물, 공작물 등 손해보험 가입대상 전체(72,234건)를 대상으로 가입현황 전수조사 시행(6월), 미가입 92건에 대하여 조치중(8월)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4. 7. 31.기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4년말 집행예상액	
				예상액	집행률
노후 시유 건축물 점검 및 시설안전수선비	250,000	117,370	46.9%	237,166	94.9%
재산화재 공제(보험)료	50,000	31,884	63.8%	50,000	100%

□ 향후계획

- 안전점검 용역비·수선비 집행 및 정비 결과 보고 : ~ '24.11월
- 공제(보험) 가입 누락 추가 가입 및 가입 오류 정정 등 : ~ '24.11월

작성 자 재산관리과장: 이은영 ☎2133-3271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3272 담당: 김민주/류승휘 ☎3299/3282

IV.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

□ 세입현황

(단위: 백만원, '24. 6월말 기준)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산전망	
				금액	결산율
합계	25,414,110	12,949,808	11,993,237	25,360,659	99.8%
시세	24,235,274	11,483,233	10,577,005	24,235,274	100.0%
세외수입	244,797	178,436	128,093	191,365	78.2%
보조금	1,362	1,343	1,343	1,343	98.6%
보전수입 등	932,677	1,286,796	1,286,796	932,677	100.0%

□ 세출현황

(단위: 천원, '24. 7월말 기준)

구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금액	집행률
합계	3,213,791,210	855,588,194	26.6%	3,198,398,319	99.5%
재무과	878,087,223	516,702,807	58.8%	870,374,239	99.1%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591,472	297,188	50.2%	583,385	98.6%
2023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52,883	222,230	87.9%	246,284	97.4%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309,155	309,155	100.0%	309,155	100.0%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306,600	23,605	7.7%	154,174	50.3%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7,433	15,000	54.7%	26,250	95.7%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88,590	38,000	42.9%	56,670	64.0%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55,926	115,500	45.1%	233,600	91.3%
기본경비	384,904	196,942	51.2%	366,014	95.1%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75,870,260	515,485,187	58.9%	868,398,707	99.1%
재산관리과	40,560,808	38,995,493	96.1%	39,649,089	97.8%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23,480,290	22,670,388	96.6%	22,671,772	96.6%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745,660	287,501	38.6%	674,314	90.4%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27,078	60,500	47.6%	123,600	97.3%
기본경비	42,773	24,953	58.3%	42,773	100.0%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5,980,528	15,952,151	99.8%	15,952,151	99.8%
공유재산 대부료 반환금	184,479	-	0.0%	184,479	100.0%

구 분	예산현액	집행현황		결산전망	
		금액	집행률	금액	집행률
계약심사과	120,257	82,527	68.6%	120,257	100.0%
계약심사 업무추진	48,000	39,075	81.4%	48,000	100.0%
기본경비	72,257	43,452	60.1%	72,257	100.0%
세제과	1,772,055,968	17,391,506	1.0%	1,772,055,968	100.0%
재정보전금	1,767,463,483	14,450,000	0.8%	1,767,463,483	100.0%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653,969	1,326,985	50.0%	2,653,969	10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62,544	104,257	64.1%	162,544	100.0%
마을세무사 운영	16,628	14,628	88.0%	16,628	100.0%
개별주택가격 공시지원	1,369,003	1,345,786	98.3%	1,369,003	100.0%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244,552	46,250	18.9%	244,552	100.0%
세제개선 정책토론회	20,000	20,000	100.0%	20,000	100.0%
기본경비	125,400	83,600	66.7%	125,400	100.0%
국고보조금 반환	389	-	0.0%	389	100.0%
세무과	516,921,368	278,897,954	54.0%	510,235,757	98.7%
시세 징수교부금	503,317,200	276,624,232	55.0%	503,317,200	100.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253,747	143,559	56.6%	253,747	100.0%
지방세고지서 인쇄 통합관리	1,222,980	356,625	29.2%	1,006,625	82.3%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37,267	13,668	36.7%	37,267	100.0%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427,225	80,384	18.8%	427,225	10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110,000	57,038	51.9%	110,000	100.0%
지방세입 부과·징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000	30,000	100.0%	30,000	100.0%
지방세 불복대응 비용	227,000	61,600	27.1%	181,600	8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941,804	969,700	49.9%	1,941,600	100.0%
세무종합시스템 개선	8,267,532	2,200	0.0%	1,849,200	22.4%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35,962	465,281	49.7%	930,642	99.4%
기본경비	150,651	93,667	62.2%	150,651	100.0%
38세 금징수과	6,045,586	3,517,907	58.2%	5,963,009	98.6%
고액 체납시세 징수	635,190	403,225	63.5%	635,190	100.0%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089,762	910,979	43.6%	2,007,185	96.0%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지원	3,244,593	2,146,672	66.2%	3,244,593	100.0%
기본경비	76,041	57,031	75.0%	76,041	100.0%

V.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5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25	23	-	2	-
	시정·처리요구사항	16	15	-	1	-
	건의사항	6	5	-	1	-
	기타(자료제출 등)	3	3	-	-	-

시정 ·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2020년부터 현재까지 1억 이상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음. 계약이 유찰되었다면 이를 수의계약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음.</p> <p>향후 계약에서는 기준에 맞게 진행해주길 당부함.</p> <p>(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경우는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으나 유찰된 건으로 사업 적기 추진 등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입찰이 유찰된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 및 과업 내용의 난이도 등을 재검토하도록 안내하고, 계약과정에서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최근 2년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총 11건이 재상정 되었는데 사업목적 변경, 설계 변경, 금액 재상정 등의 사유로 재상정 되었으며 이들 중 1건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로 인해 삭제되었음.</p> <p>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12건(가결 11, 삭제 1)이 재상정되었음 ○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상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23년 재상정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table border="1" data-bbox="628 607 1434 725">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합계</th> <th colspan="2">변 경</th> <th rowspan="2">취소</th> </tr> <tr> <th>목적 및 용도변경</th> <th>사업비 증가</th> </tr> </thead> <tbody> <tr> <td>안건</td> <td>12</td> <td>5</td> <td>6</td> <td>1</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변경을 통해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원화를 해소하는 건 등이 있으며, 사업비 증가는 실시설계 반영 및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에 따른 건으로 불가피하고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그간 의회 의결권 훼손을 방지하고자 사업부서에 취소·변경 사업의 재상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독려한 결과이며, 또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타당성 있는 사업이 확행되도록 교육·주지시키고 있음 ○ 공유재산 관리계획 확행 및 재상정 교육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과 토지 소유자 불일치 공유재산 관리 철저(재산관리과-4893호, '22.12.22.) - 안건 사업부서 대면교육 ('23.2월, 5월, 8월, 10월) - 시·구 재산관리 담당 집합교육('23.4.28.) ○ 앞으로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사업의 문제점 및 민원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은 물론,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및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심도있는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음 	구분	합계	변 경		취소	목적 및 용도변경	사업비 증가	안건	12	5	6	1
구분	합계			변 경			취소						
		목적 및 용도변경	사업비 증가										
안건	12	5	6	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세무조사 세원발굴 실적을 보면 자치구 취득세가 과다하게 누락된 것으로 보임. 자치구 지방세 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세무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치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방세 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자치구 세무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관계법 개정법규 및 적용요령 교육 ('23.4월) - 세무조사 기법 공유 및 추정사례 교육 ('23.5월) - 법인 회계프로그램 설명 및 불복사례 교육 ('23.11월) - 취득세 분야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23.12월) ○ 25개 자치구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매년 13개 자치구, 격년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신고 누락, 착오감면, 법인 중과세 여부 등을 점검하여 탈루·누락 세원 발굴하고 자치구 업무지도로 동일사례 재발 방지 ○ 시·구 합동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기법 공유 및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가 요청한 5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시·구 합동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 기법 상호 공유 및 시·구 협업을 통한 소통강화 ○ 앞으로도 자치구 지방세 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마을 세무사들의 동별·인원별 편차도 심하고 심지어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세무사들이 많은데, 홍보와 더불어 사업구조를 재편할 것.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동행 마을세무사 제도운영 개선계획 방침 수립 (세제과-16131, 2023.11.24.) - 1동 1마을세무사 제도 폐지 및 무실적동 통폐합 등 재설계를 통한 효율적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426개동 428명→'24년 426개동 296명 -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수요집중시설로 지속적 확대시행 - 세금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홍보 강화 <p><input type="checkbox"/> 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기 마을세무사(296명) 제도 시행 ('24.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세무사 위촉장 배부 및 시, 자치구, 주민센터 누리집 명단 현행화('24.1월) - 제6기 마을세무사 홍보포스터 520부 및 리플릿 12,000부 제작·배부('24.2월) - 복지관 9회, 전통시장·아파트·쉼터 등 19회, 총 28회 수요집중시설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확대 시행('24.8월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재무국 소관 위원회 중 세수추계 자문회의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위원을 구성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며 위원 수당 지급에 활동 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는 자문회의 운영이 타당한지 검토할 것.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시장의 불규칙적인 거래 상황에 따른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통해 시장 전망 의견을 추계에 반영해 오고 있음 ○ 부동산 시장은 정부정책, 경제여건, 매매심리 등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다양한 학계·정부·민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가 필요함 ○ 특히, '23년에는 지속된 고금리, 대외경제 불확실성 등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 외부전문가를 10명까지 확대하고 한국부동산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세수추계 자문회의’는 상설위원회보다 비상설 전문가 의견 청취 성격이 강하며, 외부전문가 선정·위원의 임기·회의 개최시기 등 시장 상황에 맞는 신속,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여 법정 위원회보다는 비상설 전문가 자문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외국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으며, 특히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외국인 체납건수가 폭증하고 있고 체납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 체류외국인을 상대로 어떤 납세 의무가 있는지,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철저히 인지시킬 수 있도록 납세의무 홍보 강화할 것.</p> <p>(세무과,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보유 외국인 등록대장자료 매월 현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분 고지서 발송시 실거주지 파악으로 정확한 송달 ○ 고지서 발송시 외국어 지방세 납부 안내문 동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6개 언어), 자동차세(6개 언어), 주민세(8개 언어) ○ 외국인 주민 대상 지원시설을 통한 납세의무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주민 지원시설에 8월 주민세 납부 안내문(8개 언어) 배포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및 주민세 납부기간에 서울외국인 포털 및 SNS에 홍보 ○ 서울외국인포털에 “외국인이려면 꼭 알아야 하는 지방세 체납상식(지방세 의미, 종류, 체납시 불이익 등)” 상시 홍보 ○ 외국인 체납방지를 위해 리플릿 및 포스터를 제작(리플릿 19,550부, 포스터 314부)하여 자치구 및 외국인 관련기관에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언어 : 8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번체,간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 또한, 25개 자치구와 협업하여 특별정리 추진기간 운영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주민 대상 지원시설을 통한 납세의무 홍보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납부안내문 배포 및 서울외국인포털, SNS 등 활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 세금 수납창구를 다양화·다각화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안내문(세금납부 등 안내) 제작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 ○ ETAX(2013년~), STAX(2019년~)에서 영문서비스 제공 ○ 25개구 청사 등에 설치된 무인납부기(36대)에 영문서비스 제공('24.1.22.~)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24년 재무국 정책목표에 공동과세 제도 확대 방안 반영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검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며 자치구의 주요자원으로서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22년 결산 기준 강남구·강북구 간 재산세 격차가 당초 26.3배에서 5.4배로 완화되어 재정불균형 해소에 기여 ○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내에서 재원이 이전되는 문제이므로 자치구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 강남구 등 세수 감소 8개 자치구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자치구간 갈등만 유발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 및 전 자치구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 검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청취 등 설득 노력 바람.</p> <p>(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을 위한 국회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현행 50%→60%로 상향 ○ 자치구 의견청취 세부 내역 <p>【1차 의견조회 결과】 ('21. 1.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대(7개구) : 강남,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중구 ② 찬성(17개구) : 노원,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종로, 중랑 ③ 보류(1개구) : 강동 <p>【2차 의견조회 결과】 ('22. 12.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대(9개구) : 강남,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중구, 강동, 종로 ② 찬성(16개구) : 노원,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p>【3차 의견조회 결과】 ('23. 11.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대(8개구) : 강남, 마포, 서초, 송파, 영등포, 용산, 중구, 강동 ② 찬성(17개구) : 노원,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중랑, 종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대응 등 필요시 자치구 의견 파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세입추계 개선이 여전히 미흡함. 세외수입이 매년 추계와 징수 간 편차가 매우 크며 예산현액 대비 진도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함. 매년 세외수입은 덜 걷히고, 지방세는 많이 걷혀서 세입추계와 결산상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니 보다 정밀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성이 심한 경제·정책변화 여건 속에서도 세수추계 정확도를 향상하고자 '23년 시세예산은 예산편성 후 정부의 보유세인하 정책에 따라 재산세 감추경 실시 등 재정안정화에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및 세외수입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세수오차율 (절대값)시세 1%, 세외수입 4.4% 전년대비 오차율 축소됨 ('22년 오차율(절대값) 시세 13.3%, 세외수입 8.2%) ○ '23년부터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법정 위원회인 「지방세심의위원회」 내 '세수추계 분과'를 신설하였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추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23.9월) ○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해 세수추계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심의·의결('23.10월) ○ 세수오차 최소화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세입추계 관련 연구과제 제안('24.2월)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진 및 17개 시·도 추계 담당자 공동 세수추계 자문단 회의 참석('24.6월) ○ 부동산시장 민간 전문가 참여하는 세수추계 자문회의 개최 ('24.7월) ○ 세외수입 징수대책회의 개최, 업무관련 직장교육 실시, 독촉장 발송 등 체납관리로 징수율 제고를 통해 세수오차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진 및 17개 시·도 추계 담당자 공동 세수추계 자문단 회의 참석('24.8월 예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내 '세수추계 분과'를 통한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심의·의결 추진('24.10월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재무국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취합 및 제출 전 단계에서 재무국의 적극적인 사전 분석·검증 및 조정을 통해 의회상정이 이루어져야 함.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상정 전,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 자문을 통해 공공의 가치와 활용가치 측면에서 사업의 목적 및 달성 가능성, 규모와 비용 및 입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 더불어,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취득·처분 재산에 대하여 중요재산 해당 여부, 변경대상 여부, 1건의 의미 등 법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안건을 상정하고 있음. 향후에도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p>○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세금징수과에서는 '21년부터 선제적으로 무재산, 저소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 대해 뉴딜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체납자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알선 등 복지연계를 추진하였음 ○ 지방세징수법에 사회복지부서에서 사회복지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요청할 경우 체납자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23.1월 시행)에 따라,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무재산, 정리보류 자료를 정기적으로 사회복지 부서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시기 : 연2회(8월, 1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시민에게 반환되지 않은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급 방안을 마련할 것.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오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과오납금 집중 정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 5월(상반기), 11월(하반기) ○ 납세자의 환급신청 방법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문자 안내 - ETAX, STAX 등에서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등록 - 환급 대상자를 위한 카톡 알림 및 환급 신청 서비스 구축·운영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부과 등으로 환급 최소화 노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지방세 담당 직원에 대한 세목별 정기 교육 실시 - 소송 적극 대응으로 패소에 따른 지방세 환급 방지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38세금징수과의 가택조사 등에 있어 공무원의 사전 법적 보호 등의 조치를 마련할 것.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등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을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개문에 대한 법규정은 구비되어 있음 ○ (안전사고) 가택수색을 위한 출장시 조사관 3인 이상 조를 이루어 실시하고, 체납자가 가택수색에 불응하거나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협조요청, 경찰이 입회토록 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음 ○ (업무지침) 가택수색 매뉴얼을 통해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납자별 조사기법 및 현장 상황대응 등 가택수색 교육 실시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추가로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구입·착용하여 예기치 못한 돌발사항에 사전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 결손 과목의 징수율에 제고대책을 마련할 것. (세무과,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정리보류 대상자 실태 및 재산조사 실시로 징수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 거주 상태 및 체납법인 실태조사 - 무재산자 신규 재산조사 - 기 압류 재산의 환가가치 체납액 충당 가능 여부 판단 ○ 지방세 정리보류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사 및 압류를 수시로 실시하여 시효중단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연 2회, 금융재산 연 4회 - 차량, 건설기계, 직장조회, 골프회원권 및 기타재산권 등 연 2회 - 사업장(점포), 인허가 조사, 거주지 등 탐문조사 실시 ○ 또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6명)이 정리보류 체납액을 상시 집중관리하도록 하여 세금이 유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보류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징수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소득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고 있음 ○ 향후에도 가택수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가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사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재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요청(행정안전부) : '23.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市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간 연계 강화, 사유지 내 점유물에 대한 현황(무허가건물) 입력항목 추가 등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세무과) : '23.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재산)구분 선택항목 변경 및 추가, 물건(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여부 검증체계 도입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개선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행안부 요청 및 관련부서 업무협의 지속 추진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지방세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근속연수가 짧은 편. 타 연구원에 비하여 이직율이 높은 편으로 안정적인 연구원 되도록 노력해줄 것.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위상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수요 맞춤형 연구과제 확대 요청 ('23.11월)
<p>○ 지방세연구원 직원들에게 인재개발원 교육 훈련프로그램 이수 기회를 제공해 역량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는 곳으로 외부기관 직원의 교육은 곤란 ○ 연구원에서는 연구직 역량강화를 위한 학회 학술활동 지원, 지방세, 재정 동향정보 교류 소모임, 특강 등 실시 중
<p>○ 세입 감소에 따라 향후 서울시 재정 관리가 필요함. 학령인구 감소와 1인당 교육재정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교육재정과 연계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 조정에 대해 고민하길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저출산 및 고령화의 인구 구조 변화로, 지자체는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및 노령인구 증가로 복지지출 등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반면, 지방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여유분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자원 조정의 필요성은 있음 ○ 다만, 정부(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평생교육국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 <p>※ '24.6월 평생교육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개정 건의(교육청 법정전출금 10% → 5% 하향)</p> <p>→ 교육부 : 불수용(교육여건 악화 및 교육개혁 추진력 상실 우려 등)</p>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재산세조정교부금 지방보조금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 부서별 TF를 구성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검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자치구가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주재정권의 핵심 요소로서, 이에 대한 공동과세 조정은 자치구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 현재 공동과세 상향 입법안에 대하여 강남구 등 세수 감소 8개 자치구에서 반대 입장에 있어 TF 구성에 앞서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p>○ 김포시 편입 이슈가 외형적으로는 서울시 세수 증가로 유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포시 편입으로 사실상 재산세 공동과세 및 지역균형발전 목표 사업들의 예산과 사업 속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재무 건정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 후 재무국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예산 기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시 2조 348억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입 4,107억원 + 도세입 5,685억원 + 세외수입 등 10,556억원 ○ 동일 예산 사업의 변동 없이 정부 지원의 감소*가 예상됨 ○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 TF에서 서울시 재무건전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차등 적용(약 22% 하향), 불교부단체 전환으로 지방교부세 1,380억원 감소 등 <p>※ 자치구 영향 : 재산세 공동과세 교부액 약 11억원씩 감소 예상</p>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인쇄비의 경우 소액이라도 특정업체에 몰아주지 않도록 가격 비교를 통해 예산 절감에 노력해주시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경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의 집행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비교, 산출기초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집행 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자치구 점유 사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사용료 등 부과 현황 (재산관리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11.6.)
○ 서울시가 점유 중인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 부과현황 (재산관리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11.6.)
○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차이가 큰 원인 파악해서 보고 요청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 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11.13.)